

‘비전 2030’ 인력활용전략

취업 2년 당기고 퇴직 5년 늦춰

정부가 5일 발표한 인적자원 활용 전략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하는 국내 인구구조에 맞춰 중장기적인 인력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병역제도와 학제개편 등을 통해 청년층의 취업 시기를 2년 앞당기고 퇴직시기는 5년정도 늦춰 인력수급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 대책의 골자다.

하지만 현재의 ‘취업난’이 오는 2010년경 ‘인력난’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측이 적정한 지와 병역제도 개편이 청년 구직난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병역제도 개편=근복무기간을 전역자를 기준으로 내년 1월부터 오는 2016년 2월까지 8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6개월까지 단축해 나간다.

육군·해병대 입대자를 기준으로 하면 200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이 줄어 2014년 7월 입대자는 최종적으로 6개월 줄어든다. 우선 우선 2006년 1월~2010년 12월 입대자에게는 ‘3주 복무에 하루씩’(연 18일)의 단축 혜택이 주어지고 2011년 1월~2014년 7월 입대자에게는 ‘2주 복무에 하루씩’(연 26일)의 복무단축이 이뤄진다.

해·공군은 각각 2005년 11월1일 및 2005년 10월1일 입대자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돼 해군의 경우 2014년 6월2일 입대자부터, 공군은 2014년 5월18일 입대자부터 각각 6개월 복무단축 혜택이 주어진다.

6개월간의 복무기간 단축이 완전히 적용되면 육군·해병대는 기존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각각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이에 따른 전력 누수를 막기 위해 첨단장비를 조달하거나 숙련도가 필요한 특정분야에서 일정 기간을 복무하고 적정 수준의 수당을 지급받는 유급지원병제를 내년부터 도입, 2020년부터는 4만명 수준을 유지한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이다.

또 병역의무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는 인원을 사회봉사 분야에 우선적으로 운용하는 사회복무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현행 대체복무제는 단계적으로 감축해 폐지할 방침이다.

◇학제 개편=학제개편 계획은 일단 졸업 후 취직하고 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 힘든 구조로 돼 있는 ‘경성’학제를 연성·학제로 바꿔 학교에 다니면서도 직장 경력을 쌓을 수 있고, 졸업한 직장인들도 얼마든지 학업을 병행할 수

병역제도 2020년부터 유급지원병 4만명 수준 유지

학제개편 실업계고 특성화...직장인 대학문화 넓혀

고령노동력 활용 60세 정년 의무화 방안 중장기 검토



한명숙 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신일 교육부총리, 김장수 국방장관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비전2030 인적자원활용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함께 발표된 ‘실업계고 역할 강화 방안’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실업계고 역할 강화 방안에는 산학협력 취업약정제를 확대해 실업계고 학생들의 학비와 취업을 지원하고 현재 104개년 특성화고를 2009년까지 300개로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또 직장인 등에게 대학 문호를 더욱 넓혀 시간제 대학 등록생도 학위를 딸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취업자 특별 전형도 확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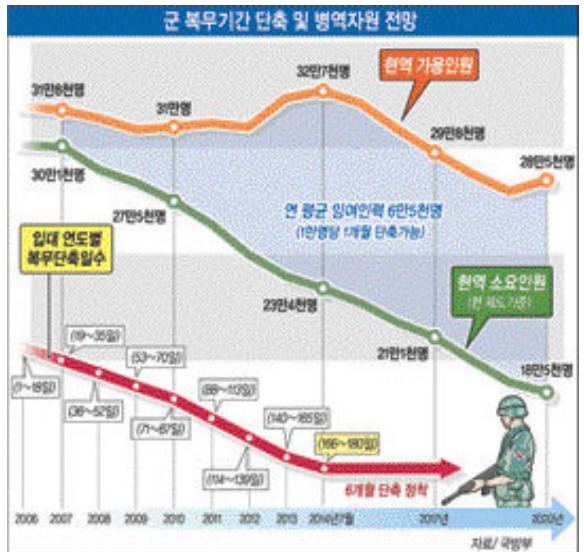
교육부는 또 추진 중인 학제개편안과 관련, 현재의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바꾸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내용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9월 학기제를 시행중인 나라는 한국과 일본 등 극소수에 불과하고 9월 학기제로 전환하면만 6세 취학연령을 만 5.5세로 6개월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것 역시 만 6세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면 결과적으로 졸업연령을 1년 당길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령 노동력 활용=현재 근로기준법상 권고적 성격인 60세 정년 연령에 대해 앞으로 법적조항을 신설, 의무화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 현행법상 60세 정년 규정이 있지만,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 300대 기업의 정년 연령은 평균 56.8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앞서 연금 수급 연령시기가 60

인력자원 활용 '2+5' 전략 주요내용

추진방향	추진과제	세부내용
취직 연령 단축유도	경력경로(career path)로서의 실업계고 역할 강화	정부·지자체·산업계가 학비 및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하는 실업계고 특성화 추진 실업계고 장학금 수혜율을 2005년 60%에서 2008년 80%까지 확대
	학제 개편	수업연한 조정 등을 통한 취학연령 단축 방안 검토 -학제 전환 개편 검토 -고등교육기관 입학시 사회 유경험자 우대 여건 조성
퇴직 연령 연장유도	병역제도 개편	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 -전투·기술 숙련병, 첨단장비운용 전문병 등 유급지원병제 도입 -전·의경, 경비교도 등 전환복무자의 공익 근무유일, 산업기능요원 등 단계적 폐지
	임금 및 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	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신을 위한 인센티브·수급 및 지원 강화 -고용연장형 고용 근무형태 도입시 소득 손문의 일정액을 보전해주는 지원제도 마련 검토
정년 연장 및 고용상 연령차별 해소	정년 연장 및 고용상 연령차별 해소	정년연장 사업주에 대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년연장장려금’ 신설 추진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세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 맞춰 정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 권고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기로 했다. 또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해 연장기간 중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정년연장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채택하도록 장려하며 현재 있는 제도를 3년간 시행한 후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급병 재원 2조 6천억 어디서 전·의경 대체인력 확보도 난제

예산확보·실현 가능성

정부가 5일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병역제도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소요예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국방부도 2008년 도입, 2020년 이후 4만명 수준을 유지할 예정인 유급지원병 도입 등에 따르는 소요 예산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유급지원병제는 의무복무 이후에도 적절한 보수를 지급해 추가로 복무를 연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방부는 유급지원병들에 대한 보수에 대해 정확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다만 전투·기술 숙련병에 대해서는 의무복무 이후 연 1천만원~1천500만원씩을, 첨단장비운용 전문병에 대해서는 3년 기준으로 총 2천만원~3천만원의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08년부터 4만 명 수준이 되는 2020년까지 총 2조 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미 1조 7천억 원은 ‘국방개혁 2020’에 반영돼 있는 만큼, 2020년까지 9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가뜰이나 2008년까지 부사관 2만 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현재 7천여 명을 충원하는데 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소요예산이 어떻게 조달할지 주목된다. 2020년 이후에도 4만명의 유급지원병을 유지하는데 매년 최소 5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방부는 유급지원병과 별도로 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입대 전에 양성해 군에서 활용하고 전역 후에는 관련 분야 취업을 지원하는 ‘입대 전 기술특기병 양성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이에 따른 추가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병역제도 개선에 따른 추가 예산이 최소 2조에서 최대 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예산상과는 관련이 없지만 전·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복무제도 2012년 이후에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해 기존 전환복무자들이 담당해오던 업무를 수행할 인력확보에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투·기술 숙련병에 대해서는 연간 1천만원 안팎의 보수로 2020년 이후 연간 4만 명 수준의 유급지원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연합뉴스

“3년차 유급병 연봉 2천만~3천만원”

관계장관 일문일답

정부는 5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군 복무제도 및 학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한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관계부처 장관과의 일문일답 요지.

-현재 검토되고 있는 학제개편안의 내용은?

▲(김신일 부총리) 우리나라 학제는 매우 경직된 ‘경성’학제이다. 학교밖으로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 힘들다. 직업세계로 진출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보다 유연한 ‘연성’으로 학제를 바꾸는 부분의 의제였고 현재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실업계의 경우도 역시 대학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동안 취업과 대학간 연결고리가 약했다. 취학시기도 9월로 바꿔 6개월 일찍 시작하는 것이 어렵나, 유아교육이 보편화 돼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과정을 1년 일찍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꼭 그렇게 하겠

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논의하고 있다. -유급 지원병제 도입시 실제 연봉이 얼마나 되는가. 예산 마련은.

▲(김장수 국방장관) 현재 기획예산처와 논의된 바로는 복무기간을 늘리게 되면 그 기간 만큼 최소한 수당으로, 대학 학자금 만큼은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의무복무기간을 포함, 3년 기준으로 2천만~3천만원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국방개혁 법안에 유급인원을 2만명 정도 활용하는 것으로 포함시켰으며, 소요예산은 2020년까지 1조7천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정년 연장이 민간 부문에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공무원 자리 늘리기로 그치는 것 아닌가.

▲(권오규 부총리) 선진국의 경우 42년 정도 일을 해야 연금의 완전 수급자가 될 수 있다. 42년이라면 67세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60세 정도이다. 2013년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 65세로 연장하는 게 현재 연금계획에 나와있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 | **1066-7557** | **1511-7610**

가성비 높은 상품, 품질 좋은 상품, 다양한 혜택이 가득합니다.

광주광역시 상품 종류/일본

- 상해/일본/1000원/3년 799,000원
- 상해/일본/1000원/4년 770,000원
- 상해/일본/1000원/5년 399,000원
- 상해/일본/1000원/6년 850,000원
- 상해/일본/1000원/7년 279,000원

광주광역시 상품 종류/미국

- 상해/미국/1000원/3년 450,000원
- 상해/미국/1000원/4년 420,000원
- 상해/미국/1000원/5년 370,000원
- 상해/미국/1000원/6년 350,000원
- 상해/미국/1000원/7년 320,000원

광주광역시 상품 종류/일본

- 상해/일본/1000원/3년 150,000원
- 상해/일본/1000원/4년 150,000원
- 상해/일본/1000원/5년 150,000원
- 상해/일본/1000원/6년 150,000원
- 상해/일본/1000원/7년 150,000원

광주광역시 상품 종류/미국

- 상해/미국/1000원/3년 150,000원
- 상해/미국/1000원/4년 150,000원
- 상해/미국/1000원/5년 150,000원
- 상해/미국/1000원/6년 150,000원
- 상해/미국/1000원/7년 150,000원

광주광역시 상품 종류/일본

- 상해/일본/1000원/3년 150,000원
- 상해/일본/1000원/4년 150,000원
- 상해/일본/1000원/5년 150,000원
- 상해/일본/1000원/6년 150,000원
- 상해/일본/1000원/7년 150,000원

광주광역시 상품 종류/미국

- 상해/미국/1000원/3년 150,000원
- 상해/미국/1000원/4년 150,000원
- 상해/미국/1000원/5년 150,000원
- 상해/미국/1000원/6년 150,000원
- 상해/미국/1000원/7년 150,000원